

ESG 경영을 위한 안전보건 전략



조기훈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ESG 경영 선포식과 함께 ESG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ESG 경영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대체 ESG 경영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들일까?

K-ES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이윤추구가 기업의 방향이었으며,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재무적인 평가가 우선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재무적인 요소(ESG)가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이제는 투명하고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SG 이슈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도적 규제강화와 투자(공적투자, 민간투자) 기관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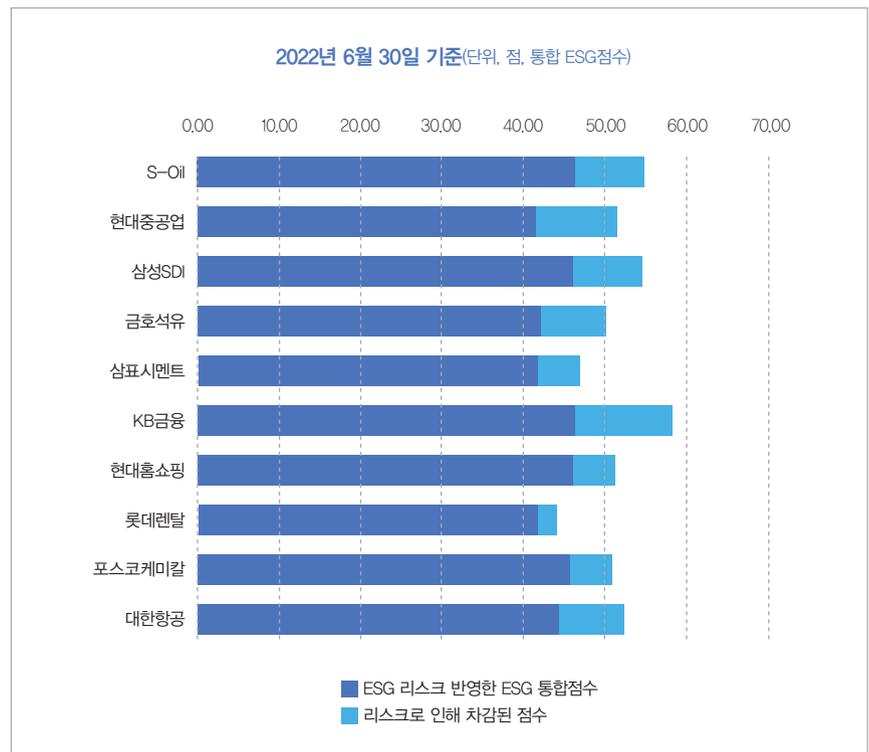
기업들의 대응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화 등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상장기업)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ESG는 선택이 아닌 기업과 공공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ESG 경영을 외면한 기업과 공공조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과거에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이윤추구가 기업의 방향이었으며,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재무적인 평가가 우선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재무적인 요소(ESG)가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이제는 투명하고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SG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제가 아닌 ESG 경영의 척도”라고 발언하였으며, 전국경영인연합회는 ‘ESG’ 중 ‘S’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없다. 8월 12일자 데일리임팩트의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직원 1명, 현대제철 2명, 동국제강 1명, 5월 세아베스틸 1명, 7월 동일제강 1명 등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정기 ESG 평가에 반영되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2022 ESG 평가에서 현대제철과 고려아연에 대해 근로자 안전 부문을 취약한 영역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S-Oil, 삼표시멘트, 현대중공업 등)의 ESG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업이 ESG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고객사로부터 협력업체 탈락, 소비자 불매운동, 정부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투자자의 외면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이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안전보건은 ESG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다. 그러나 아직까지 ESG 영역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평가가 확대되면서, 평가·컨설팅·자문을 수행하는 평가기관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수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를 지속해서 개선, 발굴하여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법들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외 평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는 600여 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 평가기관을 제외하고는 평가지표 및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 기준, 평가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업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유리한 평가기관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평가 등급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의 기업 경영 방식인 ESG 워싱, 그런 워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기업들의 ESG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며 포스코를 사례로 들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기업 ESG 실태조사 및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K-ESG’ 평가 점수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 8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반(反) 환경기업으로 제철소에서 나오는 씻가루 분진 등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만성호흡기질환과 각종 암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업종별, 산업별에 적합한 안전보건 핵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에서는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의 ESG 워싱, 그린 워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5년간 산재 관련 법 위반사항만 7,000여 건, 산재 사망자 수만 43명으로 시민단체가 뽑은 ‘산재 1위’ 기업이 바로 포스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ESG 평가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 'K-ESG' 평가 지표의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평가 방식 등을 정하였는데, 이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포스코가 직접 자신들을 평가하다 보니 상식 밖의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내외 ESG 평가기관이 평가지표와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ESG 등급만으로 기업의 ESG 경영활동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이 일부 기업이 공개한 ESG 경영 보고서 중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잘하고 있는 내용만 일부 기술하고 있었고 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율 등과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안전보건 항목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업종별, 산업별에 적합한 안전보건 핵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에서는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의 ESG 위상, 그런 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ESG 안전보건 핵심평가 지표 개발(안전보건 분야 KIHA-ESG)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안전보건 전략 수립방안 연구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